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대한 단상

필자는 꼬마선충을 소재로 다양한 생물학
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15년간 해오고 있다. 오래 전, 아마도
1993년경으로 기억한다. 필자가 미국에서 대
학원생일 때의 일이다. 위스콘신주 메디슨이
라는 도시로 가는 국내선 작은 비행기 안이었
다. 대부분의 승객은 꼬마선충 연구자, 영어
로는 'worm breeders' 들이었다.

누구를 위한 법인화인가

전 세계에서 꼬마선충 연구를 하는 교수
학생들이 다 모여서 지난 2년간의 연구 결과
를 발표하고 토의하는 중요한 학회에 가는
길이었고, 따라서 그 비행기 안에는 대부분
같은 분야 연구자들로 가득 차다시피 하였
다. 승객 중 한 할머니가 발표 준비를 하느라
자료를 열심히 보고 있는 일행 중 한 사람에
게 물었다. 무슨 일로 메디슨에 가냐고. 이
친구는 벌레 (영어로 선충을 'worm'이라 통
칭한다) 연구자들이 2년에 한 번씩 모여 학회
를 벌인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이
할머니가 엄청나게 화를 냈다. 국민 세금으
로 감히 형편없는 벌레 연구하는데 돈을 쓴
다고... 우리가 앉아 있던 자리 바로 앞자리
에서 머리가 좀 벗겨진 중년 아저씨가 난처
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는 다름 아닌 200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
상한 호르비츠 교수였다. 그렇다. 기초과학

이란 이런 것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국민의 세금으로 그런 연구를 음지에서 꾸준
히 하는 것이다. 대학이란 그런 기초학문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다. 대학에서의 자유로
운 영혼이 고도의 창의력의 원동력이다.

국립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학교로 2011년 12월 28일 바뀐다. 그런데 안
팍으로 말이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
는 과연 지금 진행되는 법인화가 정통성을
가진 법인화인가이다. 1980년대부터 논의를
진행해 왔고 서울대학교가 원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 대학 구성원들의 합의의 결
과인지 일부 집행부의 의견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거니와, 직접적으로 2010년 12월 법인
화 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정통성이 전
혀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심지어 서울대 본
부가 원하던 사안에 대한 토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안이 법으로 그대로 통과되었고, 그것
도 날치기로 되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되었다.

이렇게 출범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
교는 누가 봐도 서울대가 원해서 된 멋진 작
품이 아니라 갑자기 꾸러진 졸속 작품이다.
그 날치기 과정에 한 번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음이란!! 이러한 서울대학교 법인의 '태생
적' 한계는 향후 서울대학교의 자율적 지위를
흔들 수 있는 명분을 강력하게 주었다는 엄
청난 문제를 안겨 주었다. 되돌릴 방법이 있



글 이준호 서울대학교 생명과
학부·생물물리 및 화학생
물학과 교수
elegans@snu.ac.kr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미생물
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캘리포니아공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U.C. 버클리에서 박사 후 연
구원과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등을 지냈다.



을까? 아무리 늦었다라도 최소한 법인이 출범하기 전에 강력한 유감 표명과 의지 천명 등을 통해 서울대 내부의 힘으로 진행되는 법인화임을 알리는 것이 정말 최소한의 요건 일 것이다.

출발부터 위기에 빠진 기초학문

국립대학 서울대학교 설치 운영에 관한 법에 의하면 법 인화는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역량을 향상시킴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 즉,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 및 연구 역량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법 32조에 의하면 총장은 4년 단위로 운영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성과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도별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 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년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입장에서 예산도 주고 자율성도 다 보장해 주기보다는 효과적인 통제를 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대목이다.

더 걱정인 것은, 예산 배분의 과정에서 성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게 정량적 성과 위주로 가게 될 것이고, 기초에 해당하는 학문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인화가 시류에 맞는 학문만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산 확보와 자율화, 누가 주체가 되어 하는가가 중요하다. 대학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것이라면 그나마 힘이 실릴 것이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라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학을 끌고 가고자 할 것이 뻔하다. 오히려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시행령을 제정하신 분들은 기초학문의 위기 문제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시행령 17조에 의하면 기초학문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초학문을 지원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행령을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하다. 17조의 제목은 기초학문의 지원 육성으로 되어 있고, 1항에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 육성계획 수립 등을 위해 이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다. '등'의 힘을 느껴 보시라! 기초학문이 중요한 것인지, '등' 필요한 분야가 중요한 것인지 알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 항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기초학문진흥위원회가 아니라 '필요분야 진흥위원회'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자조가 나오게도 생겼다.

꿈수가 유행어가 되는 이상한 세상이다 보니 이 조항이 정말 이상해 보인다. 최근에 이 문제 때문에 서울대 법인화 추진단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수, 학부생, 대학원생들에게 각각 기초학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 전반에 걸쳐 그 토대가 되는 순수학문 분야'라고 답한 비율이 학부생은 51.3%, 대학원생은 56.4%였다. 그런데, 교수는 41.8%만 이것에 동의했고, 오히려 약간 더 많은(42.6%) 교수들은 '각 학문 분야별로 기초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답했다. 학생들은 이 항목을 선택한 수가 훨씬 적었다. 즉, 학생들은 순수학문을 기초학문이라 보았고, 교수들 중 상당수는 모든 학문분야가 다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진다고 답한 것이다.

기초학문진흥위원회가 어떤 사업을 하면 모든 학문분야의 기초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밥그릇 챙기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학생들은 그런 이해에 기초하지 않으므로 다르게 답한 것으로 보인다.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 참으로 오묘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시행령으로 인해 기초학문의 진흥은 출발부터 좌초하게 생겼다.

효율성 일변도 대학 운영은 위험

건강한 생태계는 그 구성원이 얼마나 다양한가에 의존한다. 다양성이 클수록 그 생태계는 안정적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자유도가 커야 보장될 수 있다. 목을 조르면 다양할 수 없다. 물론 방종이나 무임승차는 안 된다. 이는 대학의 자정 능력을 믿으면 되는 것이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사태 때와 같이 우리나라의 과학자 사회는 충분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당당하게 보여주지 않았던가. 대학을 외부에서, 위에서 끌고 나가는 것은 필요 없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대학을 운영 효율성 일변도로 끌고 나가면 이는 달리는 자전거와 같아서 잠시 서서 뒤돌아보려 하면 쓰러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학은 달리는 자전거라기보다는 튼튼한 다리로 버티고 서 있는 상아탑에 더 가까워야 하지 않을까. **ST**